



##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수여식



본회(KEA) 윤종용 회장은

2010년 8월 20일(금)

한양대 2009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는

경북대 명예공학박사, 영남대 철학박사에

이어 세 번째 학위입니다.

## 전자산업진흥회, IEEE와 국제표준화 업무협력 MoU

- IEEE 국제표준활동의 국내거점기관으로 역할 수행 -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 회장 윤종용)는 전날(7월 20일) 상암동 전자회관에서 IEEE-SA와 표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국내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KEA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Defacto(사실상)표준에 대한 거점기관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통신·IT 산업계에 영향력이 높은 IEEE 국제표준화 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노력하여 왔다. 금번 MoU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IEEE-SA와 전략적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양해각서는 KEA와 IEEE-SA간 지역 표준 및 국제 표준의 직·간접적인 연계와 촉진을 공통의 목표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양 기관간 기술교류 및 의사소통 촉진 ▲표준개발활동에 관한 정기적 정보 교환 ▲양 기관간 연락관 임명 및 자국내 주요거점 역할 수행 ▲공통관심분야의 표준개발 프로젝트 선정 ▲표준관련 세미나, 워크샵 및 컨퍼런스 등의 공동 개최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전상현 KEA 상근부회장은 “IEEE-SA와 전략적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전자·IT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촉진하고, IEEE-SA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선진 기술 공유를 통한 표준협력체계를 강화해 진흥회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 IEEE-SA 국제민간표준 거점기관 소개

### ○ 사업배경 (필요성)

- 사실상 표준화 기구의 국제표준화 위상 강화 및 활동 부각
- 이에 따른 사실상 표준화 기구의 시의적절한 대응체계 마련 시급
- 국내 산업과의 관계 밀접
- 글로벌 IT산업 위상 대비 국내 IEEE 표준화 활동 강화 필요

… 현재 국내에서 신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IEEE 민간표준화 대응활동을 국가 지원 하에 대표기관을 선정하여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코자 함

## ■ KEA(사업수행기관) 역할

### ○ IEEE 국내·외 표준화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산, 학, 연, 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외) 각 국가 / 지역별 주요 컨소시엄간 표준화 협력강화(포괄적 MOU 체결 등)

### ○ 표준화 과제 발굴 및 전략적, 체계적 활동 기반 구축

- 글로벌 사실상 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기술 우위에 있는 전자·IT 신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반영 기여
- 협력기능분야 선정 및 단계별 연구과제 추진

### ○ 기술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표준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 국내·외 표준기술 전문가의 교류의 장 마련, 전문가 DB 구축
- IEEE 표준화 대응을 위한 단일체널로 정책 지원 일원화

## “전자제품PL지원센터 제5기 운영위원회 출범”

- 제26차 운영위원회 개최, 최병록 교수 위원장 선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PL지원센터는 지난 8월 25일 제2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기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이날 제5기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서원대학교 최병록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2012년 6월까지 임기 2년을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위상제고 등을 위해 신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오재근 실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추가 위촉하였고,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회를 가졌다.

PL지원센터는 지난 상반기 동안 총 200건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중 확대사고는 24건, 품질사고 12건, 제품불만이 7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PL지원센터는 지난 2002년 7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지원, 대정부 정책 건의 등 소비자와 전자제품 제조업체간 교량역할을 담당당하여 왔다.